

대전시, 청년 전세피해 예방 나서 ZERO 로드맵

대전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전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현장 홍보를 결합한 '2026 대전시 전세피해 ZERO 로드맵'을 추진한다.

시는 '전세피해 ZERO, 대전 청년 주거 SAFE'를 슬로건으로 교육, 디지털 홍보, 현장 홍보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통합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청년 대상 실전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집담(探)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전세계약 구조와 계약 절차, 주요 전세사기 유형, 확정일자과 대항력 확보 방법 등 계약 실무 중심 내용을 다룬다. 특히 실제 피해사례 분석과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계약서 작성 실습 등 실습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캐릭터 '꿈돌이'를 활용한 디지털 홍보 콘텐츠도 제작한다. '꿈돌이 안심 QR 스티커'를 부착해 현장에서 바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부서 협업과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해 추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봉 기자

천안시, 남아공 현지서 수출통상 간담회 개최

천안시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OKTA) 케이프타운지회와 수출통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천안시 대표단이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순방하는 5박 8일 일정 중 주요 경제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석필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 대표단과 이동욱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케이프타운지회장, 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측은 지난 2016년 체결된 경제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고도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실질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천안시와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케이프타운지회는 기존 협력 기반 위에 △천안시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확대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다변화 △수출 품목 발굴 △정기적 교류 및 협력 채널 구축 △맞춤형 무역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시는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욱 지회장은 "천안시와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 지역국회의원 당적 초월한 맞손

최민호 시장, 19일 서울서 강준현·황운하 의원과 행정수도 완성 정책 간담회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국회의원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19일 세종시서울사무소에서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민호 시장과 지역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위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

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협력을 다짐했다.

우선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행정수도에 관한 헌법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별 개헌 방안이 행정수도 의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 향후 헌법 개정 시 우선적으로 행정수도 관련 헌법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모은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뜻이다.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재정부족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세종시가 처한 구조적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의미가 크다. 황운하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와 같이 정률제 형태로 적용하되 그 비율을 1%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강준현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별도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국회의원과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봉 기자

충남·중부지방산림청, 산불 공동 대응한다

오는 4월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합동 대응체계 운영

충남도도와 중부지방산림청이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힘을 합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조동 대응을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합동대응체계 운영에 따라 양 기관은 우선 오는 26일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산불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현장 대응 절차, 주민대피 지원체계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

자체가 현장 지휘를 맡아 주민 대피와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만큼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본부장(도지사) 및 차장(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자치안전실장), 통제관(환경산림국장) 지휘 아래 14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 노인 요양시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1360명을 배치했으며, 야간 산불에도 대비하기 위해 신속대응반 25개조 143명을 배치했다. 산불원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고, 이러한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해 불법 소각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자동감시체계도 운영 중으로, 올해 10개 시군에 산불진화차 신규 보급 및 4곳(공주, 서산, 청양, 예산)에 기계화

산불 진화 장비를 구축한다.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산림청 진화 인력과 기술자원을 즉시 투입하고, 중부지방산림청과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를 공동 운영해 선제적인 초기 진화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헬기와 산불전문진화 인력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국·시유림 구분 없이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84명을 운영하며, 충청권에 배치된 산림청 헬기 11대와 도 입차 헬기 5대가 20분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도를 운영한다. 또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8대를 신규 도입하고, 21대의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해 초기 진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서산시에 산불대응센터를 확충, 총 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주민과 오창산단 악취관리 나선다

산단 주변 40개 지점 악취 모니터링, 상습 민원 해소

충북도가 오창산업단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도는 산업단지 주변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오창산단 악취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청정대기 환경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

오창산단은 산업시설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이에 충북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 발생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2015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90회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산업단지 악취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환경지킴이는 오창산단 인근 주민 4명으로 구성되며, 2개 반으로 편성해 지난 3월 1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악취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

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산업단지 배출 사업장과 주거 밀집지역 등 총 40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산업시설 23곳, 아파트·학교 등 주거지역 17곳이 주요 대상 지점이다.

환경지킴이는 기상 상황과 풍향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순찰하며 악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악취가 감지될 경우 관할기관인 청주시에 즉시 신고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청주시가 현장 확인과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 측정·분석을 진행한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특히 악취 발생이 잦은 여름철(6월~9월)에는 모니터링 횟수를 늘려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악취 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 합동점검도 병행하는 등 산업단지 악취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프로야구 임시 공영주차장 운영해



대전 중구는 오는 28일 2026년 KBO 정규시즌이 개막함에 따라 대전 한화생명파크를 찾는 야구팬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장 일원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전국 단위의 많은 관람객이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경기장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운영되는 임시 공영주차장은 야구장과 인접한 총 세 곳의 부지를 활용해 133면 규모로 조성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흥동 사회복지회관 부지(대흥동 115-1번지 일원)에 37면, 중구 노인복지관 부지(부사동 261-1번지 일원)에 23면의 주차 공간이 개방된다. 아울러 73면 규모로 조성되는 대서문화공원 부지(대사동 179-1번지 일

원)의 경우, 다가오는 4월 초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해 야구팬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중구는 주차장 조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임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지 차량으로 인해 정차 필요한 방문객이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을 방지하고자, 곳곳에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장기 주차 차량 앞 유리에 직접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 당일 야구장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주차차 단속을 평소보다 대폭 강화하고, 단속 관련 사전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봉 기자



중구다움 통합돌봄은 일상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Jung-gu, Daejeon Metropolitan City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 ☑ 가사·식사·이동·방문 목욕지원 등 **일상돌봄서비스**가 강화됩니다.
- ☑ **주거환경 개선**으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습니다.
- ☑ 거주지에서 받는 **양·한의 방문의료**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 퇴원 후도 걱정 없는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찾아옵니다.
-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돌봄 사업**으로 정서 안정, 위기 예방을 돕습니다.

중구 온마을돌봄 사업 추진

- ☑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가 **집에서 운동과 재활교육**을 도와드립니다.
- ☑ **기존 이동지원과 함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 중구 4개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온돌건강교실**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기세요.
- ☑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웃애(愛) 돌봄추진단'**이 상시 돌봄에 나섭니다.

문의처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 ☎ 042-606-7422